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실태 고찰과 대안

김영이

1. 여성장애인의 현황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수는 전체장애인의 약 40% 인 56만 명으로 추정됨.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며 그 중 45%인 약 200만 명을 여성장애인으로 볼 수 있음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7%인데 비해 비장애여성은 35%, 남성장애인은 41.1%, 비장애남성은 17.8%로 나타남.
-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대부분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취업에 그치는 실정임.
- 200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교육 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병원 데려가기 등을 지적하고 있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총1600회, 284건으로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159건), 성추행30.9%(88건), 성희롱 15.5%(44 건) 순.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46.5%(132건), 2회 이상 33.8%(96건), 1년 이상 17.6%(50건), 5년 이상 2.1%(6건)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매우 높음.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40.0%로 남성장애인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02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7.1%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여성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 재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여부에서 팩스(남성장애인 3.2%

여성장애인 1.5%), 컴퓨터(남성장애인 14.4%, 여성장애인 5.5%), 인터넷(남성 장애인 9.0%, 여성장애인 3.6%)등에서 여성장애인의 보유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들 조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 됨. 가장 두드러진 예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음.
- 2003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2천 552억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19%가 증액된 3천 36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차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물성적 일반예산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성특정적 예산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2억2천만원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큼.

3. 여성장애인 인권보장을 기본 방향

1). 기본권 보장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

는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양성평등과 장애·비장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모성권 등 사회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의 통합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배제되고 성별통계와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간과 되었음.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소수자인 여성장애인 문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성적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며, 여성관련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필요함.

4.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1) 관련부처 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국회의원 및 고위 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복지부·노동부·교육부·여성부 등 관련 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이 없고 국회의원 및 고위결정직에 여성장애인의 진출비율이 매우 미미하여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한계가 큼.

2) 인권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 속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여성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도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3)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와 지원제도 마련

최근의 모성권 논의는 비장애여성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음. 200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 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 교육 시가 상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병원 데려가

기 등을 지적하고 있음.

4)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19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여성의 절반인 49.5%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총 1600회, 284건으로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159건), 성추행 30.9%(88건), 성희롱 15.5%(44 건) 순.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46.5%(132건), 2회 이상 33.8%(96건), 1년 이상 17.6%(50건), 5년 이상 2.1%(6건)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의 증설 및 운영비 상향 조정
-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신설
- 여성장애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의료·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5)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체계 구축

2002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7.1%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여성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7%로 전 국민 대상조사 19.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 의료관리체계의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확대 및 방문 간호 제도 마련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 보완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과 의료진을 위한 가이드 책자 작성 배포

6)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7%인데 비해 비장애여성은 35%, 남성장애인은 41.1%, 비장애남성은 17.8%로 나타남. 대졸 이상의 학력은 4.2%로 고학력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실정임.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성별통계 구축
- 장애여아 조기교육 의무화
- 성인지력 향상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과 과정에 의무화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개발
- 여성장애인 지도자를 위한 의식화 교육과 리더십 훈련 지원

7)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생계대책 마련과 평등한 노동권 보장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신원보증문제, 안정된 취업처가 없어 일시적인 취업에 그치는 실정. 충북지역에 거주, 활동하는 여성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7명이었고 취업자는 1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명은 다른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성장애인의 생계지원책 마련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 장애인 취업관련 성별통계 구축
-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50%를 여성장애인으로 할당 명문화
-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작업의 체계화와 여성 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적합직종 분야에는 여성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융자금 중 여성장애인 할당 명문화

8) 여성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40.0%로 남성장애인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재가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여부에서 팩스(남성장애인 3.2%, 여성장애인 1.5%), 컴퓨터(남성장애인 14.4%, 여성장애인 5.5%), 인터넷(남성장애인 9.0%, 여성장애인 3.6%)등에서 여성장애인의 보유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9.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 마련

가부장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인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은 비주체적으로 대상화되기 쉬우며 역량강화가 어렵고 자립생활자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임. 현재 국내

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표방하는 15개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실제 기관 담당인력의 90% 이상이 장애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장애인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모형 개발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 여성장애인 단체지원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장애 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